

신안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들어선다

해수부 공모 선정... 60억 들여 내년 완공 원물수급부터 가공·유통까지 원스톱 처리

신안군은 국내 최대 양식새우 주산지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에는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

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양새우의 원물 수급에서부터 급냉, 보관, 가공(간새우 등),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신안군은 양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관내 양새우 평균 생산량의 20% 수준인 800여t을 보관·가공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중 출하 조절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신안군이 지난 2019년부터 도전을 시작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3번의 도전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양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양식여가의 경영 안정화와 함께 신안군의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국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양새우양식은 22년 기준 262여개(862ha)에서 3850여t(546억원)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00여 원의 생산고를 달성하고 있다.

/신안·박재태 기자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양식여가의 경영 안정화와 함께 신안군의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국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양새우양식은 22년 기준 262여개(862ha)에서 3850여t(546억원)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00여 원의 생산고를 달성하고 있다.

/신안·박재태 기자

강진 민원소통위 출범 '초읽기'

전문위원 60명 공개모집... 사전 갈등 조정 기대

'소통으로 연결되는 창조'의 '신강진' 건설을 향한 강진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원소통위원회'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전문위원은 지난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공개모집 등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6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읍면사무소를 운영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 온 데 반해,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 갈등 조정에 힘을 쏟는 구조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다.

내년 1월,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의뢰할 민원을 최종 조율하고,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민원대상을 확정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 2024년 국고지원 건의 신규사업 52건 발굴

국가어항 건설·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 1398억원



진도군은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52건을 발굴, 사업비 139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17건에 건의액 773억원, 해양수산부 7건에 건의액 206억원, 행정안전부 3건에 건의액 169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어항(서방항) 건설,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금호도-모도 체류관광섬 조성, 논농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 청년 후계농 아열대과수 영농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전문 처리 시설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발굴했다.

또 계속 사업으로는 해항·연대자

연재 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 군내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등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업과 자체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전남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정부 정책과 민선 8기 공약에 맞게 신규사업을 선점하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비롯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도·박재태 기자

목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목포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신분증,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 수도과사무소 32, 트윈스타 5층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되며, 시행 이후 최초인 2023년 2월 정기고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하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1387억원 정부예산 추가 확보 '내년 예산 쾌조'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탄력

해남군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성과로, 해남군은 지역 및 항우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부예산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

에서도 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추가 반영된 사업은 ▲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 사업(총사업비 470억원) ▲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총사업비 485억원)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남도 달빛 수변 공영장 조성 사업(총사업비 432억원)이다.

특히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가 지방비 투입 없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예산 추가확보 성과는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최종 승인까지 정부안에 누락된 주요 현안 사업의 대응 논리를 마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명원관 해남군수가 수차례 직접 국회를 방문해 문제감 지역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농해수위 의원, 운영덕 예결위 의원, 민병덕 예결위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군은 정부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는 등 전례 없는 체계적인 대응도 펼쳐왔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무안군은 군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에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무안군과 무안군 약사회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남악에 위치한 바른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인 밤 10

시~12시까지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무안·박태연 기자

영암, 3차 특별교부세 17억원 추가 확보

총 15건, 50억원 성과

영암군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제3차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영암군은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비 총 15건, 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에서는 민선 8기 취임 후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을 통해 영암군 주요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상세히 설

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된 영암군 2022년 제3차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 분야의 영암 삼호(구 국도 2호선) 도로정비 5억원과 재난안전 분야의 지진가속도계측기 2억원 및 영암 도포수상교 개수공사 10억원이다.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군정목표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실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